

광주 원가 공개 대상 아파트 3천가구

전국 5만7천가구... 공급 물량 감소 전망 상한제 적용 아파트 광주서만 4천여가구

1·11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에서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아파트 물량은 광주지역 3천여가구를 비롯해 총 5만7천여가구가 집계됐다.

특히 오는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광주에서만 4천여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에서 신규 분양을 계획중인 상당수 주택업체들의 공급전략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

면 오는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해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는 총 5만7천445가구(103곳)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전체 아파트 공급 예정물량인 47만여가구의 12% 수준으로 향후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분양 일정 조정이나 사업 포기 등에 따라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폭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6천793가구(56

곳)로 전체 분양원가 공개 대상의 47%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2만520가구(29곳)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인천이 각각 3천872가구(23곳), 2천401가구(4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광주 3천377가구(8곳)를 비롯, 부산 8천130가구(14곳), 대구 6천484가구(10곳), 대전 633가구(1곳), 울산 473가구(1곳) 등으로 집계됐다. 또 투기과열지구인 충남 천안·아산 7천153가구(8곳), 경남 양산 4천742가구(5곳) 등이었다.

이와 함께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4만1천526가구(208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6천80가구(66곳) 가장 많았으며, 부산 1만2천248가구(18곳), 충남 1만207가구(12곳), 경남 9천927가구(10곳), 서울 9천228가구(49곳), 경북 9천871가구(11곳), 대구 7천951가구(12곳)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4천657가구(9곳)로 대전 3천232가구(3곳), 인천 3천147가구(5곳), 강원 1천997가구(4곳), 전북 1천918가구(4곳), 울산 1천206가구(2곳) 등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시행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한 물량은 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4만1천526가구(208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시설

건설사 사장 또 피습... 치안이 불안하다

광주지역 모 건설회사 사주 공모(52) 씨가 납치된 지 두달여만에 또 다른 건설회사 사장이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 건설회사 사장 A씨와 운전기사 B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경 아파트 입구에서 괴한 4명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 폭행당했다.

이번 피습사건은 공씨의 납치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공씨 납치사건 이후 주위에 서 몸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내가 공씨와 공동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피습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관성이 사실이라면 납치사건에 대한 경찰의 능숙수사가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건설회사 사장 납치 및 피습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대낮에 호텔에서 납치되고 초저녁에 피습당하는 강력사건이 잇달아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다. 경찰은 치안불신 풍조가 만연되지 않도록 수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들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또 돈을 빼앗거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복성 폭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건설업체의 이권다툼은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공모 씨 납치사건에도 수도권 건설업체와의 갈등에 따른 조직폭력배 개입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당사자가 아무리 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납치 용의자까지 검거하고도 2개월째 사건의 윤곽마저 파악하지 못했다면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건설회사 사장 납치 및 피습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대낮에 호텔에서 납치되고 초저녁에 피습당하는 강력사건이 잇달아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다. 경찰은 치안불신 풍조가 만연되지 않도록 수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개헌문제로 더 이상 국정표류 안 돼야

새해 벽두부터 개헌론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전격 제의함으로써 정치권은 개헌 찬반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침에하게 대립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론을 둘러싸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립국면으로 치닫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등 야권은 개헌 논의를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의 개헌 논의 거부 입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그리고 여론에 상관없이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책임정치 구현과 정치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년 연임제 개헌론에 공감한다. 하지만, 야권의 강력한 반대 등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민 여론도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여야가 맞선 상황에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면 정국은 개헌 문제로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고 경제 문제 등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올해는 부동산과 환율 대책, 기업 활력 회복과 노사관계 안정,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마무리와 북핵 불안 해소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모적이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 공방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정치권은 개헌공방과 정국 운영을 분리해 개헌문제는 개헌문제대로 다루고 국정현안은 현안대로 정상화해 국정표류를 막아야 한다. 개헌 논란으로 민생 현안까지 표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해 벽두부터 개헌론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전격 제의함으로써 정치권은 개헌 찬반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침에하게 대립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론을 둘러싸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립국면으로 치닫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등 야권은 개헌 논의를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의 개헌 논의 거부 입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그리고 여론에 상관없이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책임정치 구현과 정치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년 연임제 개헌론에 공감한다. 하지만, 야권의 강력한 반대 등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민 여론도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여야가 맞선 상황에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면 정국은 개헌 문제로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고 경제 문제 등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올해는 부동산과 환율 대책, 기업 활력 회복과 노사관계 안정,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마무리와 북핵 불안 해소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모적이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 공방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정치권은 개헌공방과 정국 운영을 분리해 개헌문제는 개헌문제대로 다루고 국정현안은 현안대로 정상화해 국정표류를 막아야 한다. 개헌 논란으로 민생 현안까지 표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충위 또 “여수 시티파크 재검토해야”

여수시 결정 주목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또다시 ‘사업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여수시의 결정이 주목된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고충위에 시티파크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데 대해 고충위가 11일 ‘법리 오히려 사실 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당초 의견표명 내용 대로 이행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고충위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과 관련, 골프장 부지 경사도와 발파 피해 우려 등을 문제삼아 사업 재검토 의견을 여수시에 제시했고, 시는 지적 사항에 대해 법적, 기술적인 면을 검토한 뒤 ‘하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재검토 의견 통보가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달 안에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충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의 사업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법적 하자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 후 사업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은 ㈜여수관광개발사가 내년 말까지 900억원을 들여 봉계·둔덕동 일대 35만 여평에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특급호텔(52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마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산지전용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관타나모 폐쇄해야”

반기문 유엔 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미군기지의 테러 용의자 수용 시설을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반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취임 이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의 전임자(코피 아난)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 감옥이

폐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오늘이 관타나모 수용소 개소 5주년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취임 초 논란을 야기했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사형집행에 대한 언급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사형제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같은 추세가 확산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히 사형제를 옹호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200-2001(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세안+3 회의 참석 노대통령 오늘 출국

노무현 대통령은 14~15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특별기편으로 출국한다.

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합동정상회의를 갖고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 추진을 제안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또 14일 오후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주그룹은 11일(현지 시간) 호주 시드니 웨스틴 호텔에서 허재호 회장을 비롯, 계열사 사장단 등 4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사업계획 보고 및 전략회의'를 갖고 그룹 글로벌화 원년을 선언했다.

“대주 글로벌화 시발점 삼자”

대주그룹 호주서 '2007 사업계획 보고회'

대주그룹은 11일 호주 시드니 웨스틴 호텔에서 허재호 회장, 김익중 부회장, 박재영 부회장, 김포천 고문,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계열사 사장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사업계획보고 및 전략회의'를 가졌다.

허재호 회장은 이날 “지난해 대주는 건

설과 제조, 금융 등 삼각축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명실공히 대주의 글로벌화를 앞당기는 시발점으로 삼자”고 선언했다.

허 회장은 또 “올해 대주는 7월 해남조선소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조선사업에 더

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 건설을 통해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주그룹은 지난해 연매출 1조6천억원으로 세계 50위권으로 올라섰으며, 조선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오는 2009년에는 연매출 6조5천억원으로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차 노조 15~17일 부분파업

사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나설 것”

끝내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15일 주·야간 4시간씩, 17일 주·야간 6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성과급 사태와 관련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데 이어 파업 지도부인 중앙정책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오는 15일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간 조는 오후 1시부터 4시간, 야간 조는 16일 오전 2시부터 4시간 각각 부

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또 16일에는 회사 측에 성과급 사태 해결을 위해 협상장에 나서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성실교섭을 촉구기도 했다.

노조는 회사가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17일에는 주간 조가 오전 10시부터 6시간, 야간 조가 오후 11시부터 6시간 각각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즉각 “불법 파업을 결의한 것이며,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민·형사

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등 재계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날 파업을 결의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향후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울산여성단체협의회, 울산경제인협회,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등 100여 울산시민단체도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노사의 성과급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이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지 않도록 노조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연초부터 꼭 어지럽게 해야 하나?

檢 “김흥주씨, 한광옥씨에 인사 청탁”

뇌물수수 혐의 한씨 불구속 기소 방침

김흥주(58·구속) 삼주산업(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씨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흥주씨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준 데 대한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다 확인했다”며 “그 안에 인사 청탁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실장은 2001년 김씨에게 마포구 도화동 권 전 고문의 사무실 임대료와 월세를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씨가 지목한 특정 인물

의 인사 청탁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 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한 전 실장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명백한 진술을 확보했고 한 전 실장도 11일 피의자 조사에서 이를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시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01년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던 한 전 실장의 직무와 청탁의 연관성을 확인해 제3자 뇌물 혐의를 포착했지만 청탁 대상자들이 김씨에게 청탁 대가를 줬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박모 전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권 전 고문 사무실 운영 경비의 세부 내용을 조사, 김씨가 지불한 운영비의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했다. /연합뉴스